

【 3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출연월일 : 2005. 7. 19

발 의 자 : 정창범 의원 외 7인

□ 발의이유

-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가 회복하고 중앙정치에 예측우려가 있어
- 이에 지방분권 및 자치권 확보와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의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 촉구

붙 임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 촉구 결의문 1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폐 촉구 결의문(안)

양 주 시 의 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제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의 바람과는 반대로 기초자치 단체의원의 정당공천 및 중선거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10년 역사가 퇴보의 기로에 섰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의도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목적 하에 의결된 공직선거법은 참여정부의 플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위로서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시 『국민이 대통령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론분열 조장을 야기 시켜 국가파탄에 빠지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전 국민이 중앙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더한층 높이는 행위이다.

지난 15년간 주민 스스로 연마해 온 지방자치에 대한 결론은 기초자치 단체에는 중앙정치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를 경험한 주민 절대다수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주민들의 절규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중앙정치권 및 정당의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지역일꾼을 뽑는데 누가 진정 일꾼인가의 판단은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공천제가 시행되면 당성에 의해 후보자가 선정되고 중앙당의 바람에 의해 진정한 일꾼과는 먼 사람이 선출될 우려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당초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참 일꾼을 뽑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혁신안을 구상하더니 오히려 기초의원까지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지방자치의 역행이며 개악으로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될 경우 기초의회는 당 대 당 대립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이 생기고 패거리 정치의 형태로 변화되어 순수한 지방자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중선거제로 인한 선거구 확장으로 지나친 선거비용부담과 인구 밀집지역에 유리한 현상으로 그 지역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측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존 정당들의 나눠 먹기식 밀실야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감한 분권과 자치권 보장만이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는
국회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회될 때까지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다시 한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양 주 시 의 회